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1면	“2,100명 농촌지도자 화합 선진농업시대 열어갑니다”	1
강원도민일보	23면	강원 농촌 지도자 춘천서 미래 농업발전 협력 나선다	1
강원도민일보	03면	국힘 원주를 조직위원장 인선 또 연기	2
江原日報	03면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머리 맞댄다	2
KBS 강릉	온라인	학생부 정정 절차 무시...엥터리 기록 원인?	3
강원도민일보	15면	평창 양성평등주간 행사 "실천하는 양성평등, 함께하는 행...	4
강원도민일보	14면	오늘 '석화초·홍천중 성공 이전' 주민 공청회	4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교권보호, 선생님 존중부터	5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평창 오대천 대농갱이 치어 5만마리 방류	6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심오섭 부위원장, 박관희....	6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최규만 도의원	6
江原日報	21면	[동정] 최규만 강원도의원(횡성)	7
江原日報	21면	[동정] 심오섭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강릉...	7
江原日報	02면	道 정부 긴축 재정에도 국비 4,984억 증액 성공	8
강원도민일보	01면	반도체 인력양성 특화... "민사고 같은 교육기관 필요"	9
강원도민일보	03면	'강원형 3대 첨단산업' 육성 속도... 일부 현안 증액 시급	9
강원도민일보	07면	"전문인력 양성 특화 발판 '강원형 반도체산업' 가능성 충분...	10
江原日報	01면	'아기 울음 뚝' 출생아 年 7천명 붕괴 위기	11
江原日報	02면	춘천 서면대교 건설 국비 600억 확보	11
강원도민일보	02면	양양 현남면 주민 "개발진흥지구 해제 잘못된 정보로 혼란"	12
강원도민일보	02면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기업 유치 관건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윤희순 선양 사업 제자리 찾아야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임금 '남고북저' 격차 좁혀야	14
江原日報	19면	[사설] 평창 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에 거는 기대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국비 9조5,000억원 반영, 이젠 지키는 것이 중요	16

江原日報

2023년 08월 31일 (목)

인물 21면

“2,100명 농촌지도자 화합 선진농업시대 열어갑니다”

제26회 농촌지도자 도대회 개막

강원지역 농촌지도자들이 선진 농촌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제26회 한국농촌지도자 강원특별자치도대회가 30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변화와 혁신, 강원농업의 미래, 농촌지도자가 선도한다’는 주제로 31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개막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한기호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신영재 홍천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김진호 춘천시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등 기관·단체장과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장, 광탈규 도연합회장을 비롯한 2,100여 명의 회원과 가족이 참석했다.



◇제26회 한국농촌지도자 강원특별자치도대회 개막식이 30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한기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신영재 홍천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김진호 춘천시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장, 광탈규 도연합회장을 비롯한 도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남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최병오 한국농촌지도자 춘천시연합회장, 이찬영 태백

시연합회장이 각각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내년에는 도 농업예산을 올해보다 확대 편성하고, 도

내 농업진흥구역 1,200만평을 3년 내로 해지해 농가들이 자유롭게 땅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기호 국회의원도 “경영비 인상과 인력난에 처한 농민들이 정상적으로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내년 농업 예산이 5.6% 증액됐다”며 “군급식기본법 제정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영농발전을 선도하며 강원 농촌을 지켜온 회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농림수산위원회와 예산 증액을 논의하고, 농업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했다.

광탈규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농업의 미래를 고민하며 강원농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미기자 omme@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31일 (목)

인물 23면

강원 농촌 지도자 춘천서 미래 농업발전 협력 나선다

특자치농촌지도자대회 오늘까지
농업발전 기여 회원·공무원 표창
우수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운영

제26회 강원특별자치도농촌지도자대회가 30일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려 강원도내 농촌 지도자들이 미래 농업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농촌지도자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광탈규)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변화와 혁신, 강원농업의 미래, 농촌지도자가 선도한다'를 주제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약 2100여명의 농촌지도

자들이 참석했다.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한기호 국회의원,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신영재 홍천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김진호 춘천시의회의장, 김용복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김명배 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임상현 강원도농업기술원장, 김형숙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장 등도 참여해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도내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회원 및 공무원 41명에게 표창장이 전달됐다.

31일까지 이어지는 대회기간 동안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할 예정이며 농업기

술원에서 개발한 신기술, 4-H정년농인과 강소농 우수 농가공품, 강원 대표음식, 신기종 안전과 편의용품 등을 볼 수 있는 전시관도 운영된다. 근골격계 질환 진단 체험도 할 수 있다.

광탈규 한국농촌지도자강원도연합회 회장은 “올해 강릉 대형산불, 지역별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등 이상기후로 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고민해 강원농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매년 농업인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대회

한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확대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로 도내 농업진흥구역 약 3966만9421㎡(약 1200만평)를 3년 내로 전부 해지, 도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 시장도 환영사를 통해 “10년, 20년 후에 춘천과 강원도라는 지역에 농업이 남아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저로서 현재 강원농업은 농촌지도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강원도가 이끄는 농업에 춘천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31일 (목)

종합 03면

국힘 원주를 조직위원장 인선 또 연기

조강특위 10곳명단 전달 24곳 보류
“보류지역 인재영입 포석 아니다”

국민의힘 원주를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인선 작업이 또 미뤄질 전망이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전국 36곳의 사고당협 중 10곳의 조직위원장 명단을 확정하고, 당 최고위원회에 명단을 전달했다. 31일 예정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강특위는 또 나머지 사고 당협 26곳 중 2곳은 계속심사, 24곳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조강특위는 인선을 확정 짓지 못한 사고 당협별 구체적인 향후 방침은 밝히진 않았지만, 원주율의 경우 인선을 보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진호 조강특위 대변인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공모지역의 3분의 2를 보류 지역으로 남겨 놓은 이유에 대해 “(해당 지역에는) 선거구 조정지역도 포함돼 있고, 한 군데 지역에 (지원

자가) 많이 몰려있어 그 인재들을 추후 (총선을 앞두고) 재배치할 수도 있다”며 “이 중에는 인재영입을 위해 비워둔 곳도 있다”고 전했다. 또 보류지역 대부분이 인재영입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대해선 “아니다”라며 “웬만하면 여기 있는 인재 풀을 이용해 공심위(공천심사위원회)가 잘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원주를 조직위원장 공모에는 권이중 중앙당후원회 부회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박동수 변호사, 안재운 미래교육아카데미 대표, 윤용호 대한생활체육회 도회장,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전병선 전 원주시의원, 최재민 도의원 등 8명이 신청했었다.

이세훈

2023년 08월 31일 (목)

종합 03면

江原日報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머리 맞댄다

자치도의회 女의원 8명 내달 5일 의정활동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성 도의원들이 11대 도의회 개회 후 처음으로 여야를 떠나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다음달 5일 오전 11시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모여 의정 활동 간담회를 갖는다.

11대 도의원 48명 가운데 여성의원은 8명으로, 간담회는 의원들 스스로 추진했다. 유순옥(국힘·비례) 도의원은 “늦은 감은 있으나 여야를 떠나 성과를 나누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숙희(국힘·춘

천) 도의원도 “다른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배울 수 있을 듯해 초선 의원으로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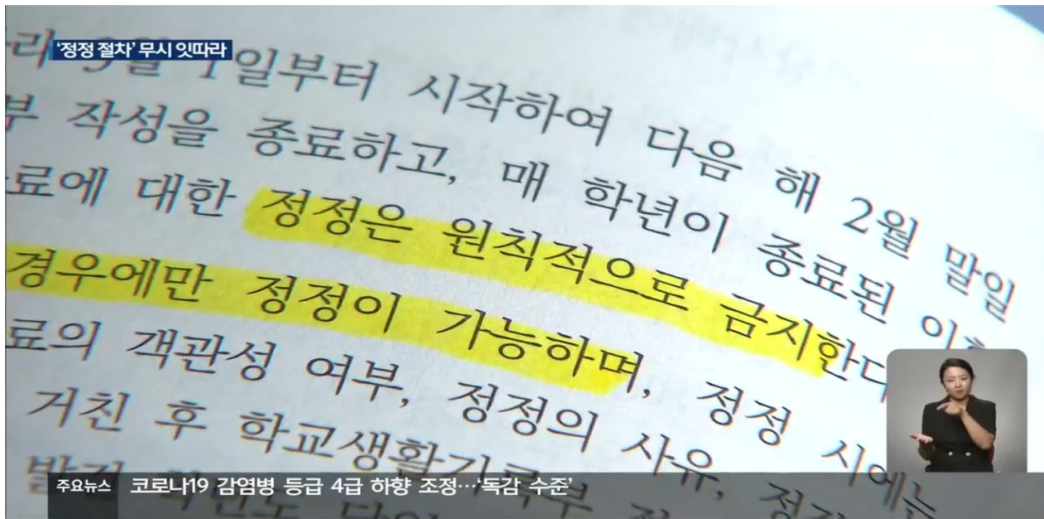
의정활동 방향도 논의하고 싶다고 밝힌 이승진(민주·비례) 도의원은 “여성의원들이 하나 돼 협치에 앞장서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짚었고 원미희(국힘·비례) 도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며 어려웠던 점을 자연스럽게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더 나아가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모임을 추진한 임미

선(국힘·비례) 도의원은 “여성들의 정치 대표성 확대 방안도 고민하면 좋겠다”고 했다. 여성 의원의 활약상에 뿌듯하다고 한 엄윤순(국힘·인제) 도의원은 “임원 구성에 여성이 없어 관련 논의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중 여성이 없음을 지적한 박윤미(민주·원주) 도의원은 “당을 떠나 한 목소리를 낼 부분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민주·비례) 도의원도 “여성인 힘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인재 발굴·양성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현정기자

학생부 정정 절차 무시...엉터리 기록 원인?



[앵커]

KBS는 최근 학교 생활기록부가 엉터리로 기재돼 학생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엉터리 기재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잘못 기재한 학생부 내용을 고치는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입니다.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는 정정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중요기록을 멋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4단계에 걸쳐 결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은영/강원도교육청 중등교육 장학사 : "무조건 4단 결재인데요. 담임 교사, 교무 부장, 교감, 교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4단 결재입니다. 전결, 대결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이런 절차가 무시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부에 잘못 쓴 봉사활동 시간을 고치면서,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4명이 주의 처분됐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도 학생 17명의 성적 관련 자료를 고치면서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4단 결재 원칙을 따르지 않고 처리했습니다.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고등학교 15곳을 감사했더니, 7곳이 정정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3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5년 동안에도 비슷한 사례가 14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정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엉터리 기재가 반복되는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쉽게 고칠 수 있는 만큼, 애초에 기록을 철저하게 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용래/강원도의회 의원 : "학생 또는 대학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을 실시할 때 보다 신중함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김영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31일 (목)

지역 15면



평창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평창군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가 30일 오후 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과 군여성단체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창 양성평등주간 행사 “실천하는 양성평등, 함께하는 행복”

평창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조혜경)가 주관한 평창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30일 오후 군문화예술회관에서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 지광천 도의원, 군여성단체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천하는 양성평등, 함께하는 행복’을 주제로 군여성단체협의회 활동영상 시청과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에 이어 박인옥(사)한국교육협회 원장이 ‘성공하는

리더의 소통기술’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또 양성평등주간 기념 전시전, 다채로운 공연과 부스 운영을 운영,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는 장을 마련했다.

신현태 sht9204@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31일 (목)

지역 14면

오늘 ‘석화초·홍천중 성공 이전’ 주민 공청회

홍천문화원 강당서 의견수렴

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민철홍)은 31일 오후 3시 홍천문화원 강당에서 석화초·홍천중 성공이전을 위한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석화초와 홍천중 이전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그동안 중앙투자심사 규제, 인근 학교와의 통합 무산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단순 학교 이전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규제가 완화되고 도교육감·군수·도의원 등 기관장이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치는데다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까지 더해지면서, 해당 사업 추

진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공청회는 △학교 이전 추진 경과 설명 △이영욱 추진위원장과 해당 학교장의 이전 필요성 발표 △지역주민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홍천교육지원청은 공청회 후 여론조사와 교육환경평가 등을 실시해 타당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 2024년부터 실질적인 이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철홍 교육장은 “이번 공청회가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승현

江原日報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서울 서이초교 선생님이 사망한 이후 교육부에서는 교육지책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고시를 마련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

는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방해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식이 구성원 간 갈등의 여지가 있고 근절 방안이 미흡하며 아동학대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기 위해

서는 교육부 고시나 조례와 같은 성문화된 법도 중요하지만 학생, 학부모, 주민의 선생님에 대한 존중 인식이 필요하다. 그동안 교권이 추락하게 된 것은 교원 지위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가 아니다. 헌법 제31조 6항은 선생님들에 대한 지위와 교육활동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급감 현상 등 사회문화 전반에 변화가 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가 귀한 왕의 DNA를 갖게 됐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 아동학대보호법이 등장하면서부터 학교 선생님들의 손과 발이 묶였다.

강원포럼

이영욱 강원자치도의원



가정교육을 통해 이뤄지던 인성교육이 오롯이 학교 선생님들의 몫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생님들의 손발을 아동학대보호법으로 묶어 놓고 지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지 못하는 교실 분위기가 조성됐다.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교권보호, 선생님 존중부터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가 사라졌다.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조선시대의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사부일체를 주장하던 유교적인 시각과 관점은 아니더라도 내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일면식이 없어 잘 모르는 사람을 지칭할 때의 호칭을 ‘선생님’이라 부른다. 아저씨, 사장님이라 부르던 지칭 명사가 ‘선생님’으로 불리기 시작됐고, 학교가 아닌 일반 직장에서도 직원 간 상호 호칭을 선생님이라 부

2023년 08월 31일 (목)

오피니언 19면

르고 있기도 하다. 하는 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집 밖에 나가면 선생님이 되는 셈이다. 선생님이 더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존재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고유명사가 돼야 한다.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에서 마련한 고시가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 또한 선생님의 학생 지도가 학대가 아닌 훈육과 사랑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학대와 훈육의 분명한 경계선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선생님들에 대한

악성 민원도 철저히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가르치는 일을 직업의 수단이나 노동의 가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만든다는 숭고하고 존엄한 가치로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선생님 스스로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사명의식은 물론 일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교육의 힘이다. 장차 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 가야 하는 힘도 교육일 수밖에 없다. 그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국가, 사회, 학부모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31일 (목)
지역

평창 오대천 대농갱이 치어 5만마리 방류

평창군은 30일 지역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진부면 마평리 오대천에 대농갱이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 행사에는 심재국 군수,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최종수 도의원, 마을주민 등이 참석했다.

대농갱이는 일명 '그렁치'로 불리는 토속어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수면자원센터로부터 무상으로 분양받아 방류했다.

이날 방류한 대농갱이는 2~3년후 30cm 정도로 성장해 오대천의 주요 어족자원이 될 전망이다. 신현태

江原日報

2023년 08월 30일 (수)
종합

[동정]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심오섭 부위원장, 박관희.원미희.김정수 도의원

정재웅(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관희(춘천) 도의원은 31일 오후 2시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에 참석.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원미희(비례) 도의원은 31일 오후 2시 강릉 제2청사 환동해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 검토' 관광.문화분야 워킹그룹 3차 회의에 참석.

김정수(철원) 도의원은 31일 오전 11시 철원군 금비펜션에서 열리는 철원군 재향군인회 2023년도 하계수련회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8월 30일 (수)
사회

[동정] 최규만 도의원

최규만 도의원(횡성2)은 31일 오전 11시 둔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2023년 둔내면 민대상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8월 31일 (목)

인물동정 21면

◇최규만강원도의원(횡성)



은 31일 오전 11
시 둔내면행정
복지센터에서
열리는 2023년
둔내면민대상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8월 31일 (목)

인물동정 21면

관광·문화 워킹그룹 회의



◇심오섭강원도의회사회문
화위원회부위원장(강릉·사진
왼쪽)·원미희도의원(비례)은
31일 오후 2시 강릉 제2청사
환동해관 대회의실에서 열리
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
과제 검토' 관광·문화분야 워
킹그룹 3차 회의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8월 31일 (목)

종합 02면

道 정부 건축 재정에도 국비 4,984억 증액 성공

첨단산업·SOC 분야 선전

정부의 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국비 9조5,167억원을 따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이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강원자치도는 오히려 올해 국비 확보액 대비 2배에 육박하는 5.5%(4,984억원) 증액에 성공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국비 확보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제 분야는 전년 대비 679억원 증가한 1조554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반도체 분야에서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비 30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사업비 20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AI 기반 K-디지털헬스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 30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수소 분야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공모에 신규 선정돼 동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54억원을 확보했다. SOC 분야는 전년 대비 4,404억원 증가한 2조2,043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담겼다.

수도권과 강원 동해북부지역

의 고속화철도 교통망 구축을 위한 춘천~속초 철도 공사비 3,214억원, 동해선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한 강릉~제진 철도 공사비 2,464억원, 수도권과 중부내륙권 연결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여주~원주 철도 공사비 423억원, 포항~삼척 철도 146억원, 포항~동해 철도 13억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도로 사업은 강원남부권 주민 숙원인 제천~영월 고속도로 공사비 74억원, 수도권 교통량 분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2경춘국도 20억원 등 3,506억원을 확보했다. 하천 및 항만 사업은 원주천 댐 건설 67억원, 동해 신항 개발 및 임항교통시설 317억원 등이다. 또 복지·보건 분야는 2조5,471억원,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2,472억원, 농림·해양·환경 분야는 1조1,481억원, 안전 분야는 2조3,146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김한수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SOC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해 최종 의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31일 (목)

종합 01면

반도체 인력양성 특화... “민사고 같은 교육기관 필요”

강원형 반도체
과연 성공할까

강원형 반도체 세부안 제시

지역별 특화 산업생태계 필요

특자도 출범 후 투자협약 순항

강원서 반도체 교육 서비스도

반도체 불모지로 여겨졌던 강원지역이 반도체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 분야 학계 관계자들은 강원형 반도체 산업 추진 첫 단계를 진행하는 반도체교육센터를 특히 주목하고 있다.

지난 29일 원주 인터볼호텔에서 본지 주관으로 개최된 '2023 강원형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포럼'에선 강원형 반도체 산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안이 다 양하게 제시되면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은 각 제안들을 강원형 반도체 산업 추진에 접목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은 강원특

별자치도 출범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원형 첨단산업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한 첫 자리였다.

이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강원도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40여개 정도 있고 관련 인프라로 반도체교육센터도 있다”며 “(강원도에)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가 큰 규모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러한 인프라들이 쌓이면 첨단전략산업 기반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자부 이규봉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인력이 부족해 다양한 반도체 인력 양성 체계를 부처 합동으로 꾸려나가고 있다”며 “지역별로 특화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고 강원도는 충분히 그러한 능력과 기회가 있다”고 힘을 실었다.

포럼에 참석한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제는, 고무신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 가 아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첨단산업이다. 무조건 가야 한다”며 “원주시가 반도체를 비롯해 이모빌리티, 이차전지, 드론,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선도도시가 되겠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30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20억원)사업 등이 반영된

것을 기반으로 강원형 반도체 산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반도체 그림자도 없었던 강원도에 일련의 반도체 씨앗은 뿌렸다”고 평가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호반도체 기업이 유치돼 원주마곡농공단지 원주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이 최근 체결되는 등 반

도체 생태계 조성이 순항하고 있다.

여기에 2024년 말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하는 등 강원 반도체 산업 추진을 위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연

구소장은 “반도체교육을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교나 강의자 등 좋은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원도에서 민속사관고처럼 좋은 반도체관련 교육기관을 만들고 이를 전국과 전세계로 서비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은·김덕형

▶관련 특집 7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31일 (목)

종합 03면

‘강원형 3대 첨단산업’ 육성 속도... 일부 현안 증액 시급

〈반도체·바이오헬스·수소 에너지〉

강원 내년 국비 9조5167억원 확보

SOC 국비예산 작년비 24% 증가

미래차 등 10개 주요사업 미반영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은 9조5167억원 규모로 집계, 강원도는 국비 목표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미래차와 전기차, 충전소양8교 등 일부 현안들은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활 및 증액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반도체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수소 에너지 등 3대 첨단산업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강원형 첨단산업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이 대거 담겼다. 강원도는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수소 에너지를 ‘3대 첨단산업’으로 내걸고 역점 추진하고 있다.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되면서 내년을 기점으로 강원형 첨단산업 육성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강원형 반도체 산업이다. 도는 신규 사업으로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30억원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45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2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를 제외한 두 건의 신규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원주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605억원이다. 수소 분야는 신규 사업으로 △동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54억원을 확보했다. 기존 사업에선 △평창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22억원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65억원을 마련했다. 도는 수소산업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수소 충전소 12개소를 비롯해 기업 유치를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 수소생산기지 등이 동해시와 삼척시, 평창군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4차 산업 분야에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75억원 등이 포함됐다.

■ SOC

양적인 측면에선 SOC 국비 예산이 작년 대비 24.9%(4404억원) 증액됐다. 철도 분야 예산은 △춘천-속초 철도 3214억원 △강릉-제진 철도 246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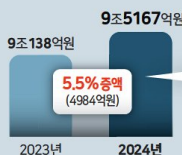
△여주-원주 철도 423억원 △포항-삼척 철도 146억원 △포항-동해 철도 13억원 등이다. 해당 사업들은 수도권과 강원 동해북부 지역 등을 연결하는 강원 지역 주요 철도망이다. 도로 분야에선 △제천-영월 고속도로 74억원 △국도 14개 사업 2011억원 △국지도 4개 사업 224억원 등을 확보했다.

■ 미반영 사업

10개 주요사업은 미반영됐다.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43억원 △AI 헬스 바이오 R&D센터 구축 및 AI솔루션 개발 실증 20억원 △차세대 체외진단 실증 및 제품화 지원 56억원 △맞춤형 분자설계 기반 노인성 질환 조기진단 및 예방기술 개발 21억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30억원 △속초-고성 고속도로 10억원 △춘천 소양8교 건설 49억원 △전기차 제 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기반 구축 25억원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12억원 △양양 서평교육센터 조성 10억원 등이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히 협조해 추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덕형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국비 9조 5167억원 확보

정부예산 2.8% 증가 역대 최저, 건전재정 기조에도 성과 달성



I 분야별 확보예산

• 경제	1조 554억원	• SOC	2조 2043억원
• 복지·보건	2조 5471억원	• 문화·관광·체육	2472억원
• 농림·해양·환경	1조 1481억원	• 안전·일반·행정	2조 3146억원

I 주요 확보사업

• 춘천-속초 철도	3214억원	• 강릉-제진 철도	2464억원	• 여주-원주 철도	423억원
• 제천-영월고속도로	74억원	• 제2경춘고속도로	20억원	• 국도 5호선	712억원
•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30억원	•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20억원		
• AI 기반 K-디지털헬스 시장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30억원	•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18억원		
• 항체-천연물 융합치료제 기술개발	20억원				
•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76억원	•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65억원		
• 기초연금	9230억원	• 생계급여	2800억원	• 부모수당	710억원
• 의료급여	3220억원				
• 관광거점도시	206억원	• 지역관광개발	41억원	• 패럴림픽 관광산업 활성화	67억원
•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	29억원				

2023년 08월 31일 (목)

특집 07면

강원도민일보

“전문인력 양성 특화 발판 ‘강원형 반도체산업’ 가능성 충분”

강원첨단산업 발전전략 포럼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강원형 첨단산업의 추진 전략과 방향을 논의한 첫 공론화의 장(場)인 ‘2023 강원첨단산업 발전전략 포럼’이 원주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첨단산업 담당부처와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의 저변이 전국적으로 확산 및 다양화 돼 있기에 강원형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등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발판으로 새로운 형태의 강원형 반도체 산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가 반도체 교육 특성과 분야를 선점하면서 앵커기업 유치 등에 나서고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및 기업혁신파크, 기술훈련특구 등 정부의 정책 사업들을 연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디지털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대해 강원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규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 내용을 싣는다.



지난 29일 호텔 인터볼로 원주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3 강원첨단산업 발전전략 포럼에서 토론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영



신훈규 부원장

이규봉 과장

김성재 소장

김주용 단장

손선영 교수

정관식 대표

박성빈 교수

배홍용 부사장

박정환 대표

◇좌장

△신훈규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부원장

◇토론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 △김성재 서울대학교 반도체연구소장 △김주용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추진담당 △손선영 상지대학교 반도체에너지공학과 교수 △정관식 ㈜핀솔 대표 △박성빈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의과대학 교수 △배홍용 HL만도 부사장 △박정환 ㈜메추 대표 <무순>

국내 시스템반도체 육성 중요
지역 특화형 생태계 구축해야
강원 반도체 교육 특화 고려

도, 인재 양성·기업 유치 추진
망광·용수·전력 등 이점 갖춰
후공정 시장 도전 현실적 대안
장기적 비전·기술력 확보 필수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지 강원
인프라 활용 첨단화 전략 필요
대규모 실증화·투자 유치 시급
기업 해외 진출 발판 마련되길

도내 미래 모빌리티 발전 지체
산·학·연·관 협력 속도전 절실

설립됐다. 30여년 동안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 강원도가 다른 지역과 반도체 분야를 나눠먹는 경쟁에 나서지 않고, 반도체 교육을 특화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일례로 서울대학교 반도체 연구소는 1년에 5~6만 건의 수강생 30명을 뽑아 반도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대략 경쟁률이 4:1에 육박한다. 강원도도 반도체 교육을 특화하면 좋지 않을까.”

△김주용=“강원도는 반도체 앵커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를 준비하고 있다. 매우 반도체 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기업에서 말하는 건 사람이다.

강원도는 실무형 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특성화고의 반도체 학과를 신설 추진하고 있다. 전문화 인력양성은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유대학 플랫폼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 기업 유치를 위해선 경쟁력 있는 부지를 조성해야 한다. 강원도는 부른 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고, 신규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및 기업혁신파크, 기술훈련특구 등 정부의 정책 사업들과 연계 추진한다. 이밖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와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등 기업을 위한 전문 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다.”

△손선영=“경기도에 밀집된 일부 기업을 강원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교해봤다. 공시지가에선 강원 지역이 경기도보다 4분의 1 정도 저렴하다. 반도체는 용수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 강원도는 저수용량 대비 사용량이 적지 않아서, 춘천이라든지 충주댐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전력 부분에서는 수도권은 계속 사용량이 증가하는 반면, 전력 설비 용량의 경우 강원도는 수도권과 10배 차이가 난다. 물류망 측면에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원주공항을 비교할 수 있다. 용인시를 중심으로 각각 김포공항 76km 인천공항 86km 원주공항 88km 떨어져 있다. 인천공항 물류단지는 항공 화물이 이미 포화상태다. 원주시에 추진하는 수출항공 물류기지를 위한 국제공항 승격이 이뤄진다면, 반도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관식=“저희 기업은 반도체 전공정보다 후공정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정 사업의 경우 강원도가 현실적으로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거나 사업체를 신설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후공정 사업도 이미 50~60년 성숙한 산업이라, 강원도가 따라잡기 쉽지 않다. 다만 불가능 하지는 않다. 옛 국내 기업 아남 반도체를 인수한 엠코 테크놀로지는 매출액 7조원 중반을 국내

충도와 광주광역시 공장에서 달성하고 있다. 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한참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2조원 가까운 매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강원도가 좋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비전을 세워 과감한 결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선도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과 무기를 꼭 갖춰야 한다.”

△박성빈=“원주시는 2002년부터 전략산업 진흥사업을 통해 의료분야 클러스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 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강원도와 원주시가 선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돈이 가장 중요하다. 다양한 기업과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다음엔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지 준비해야 한다. 전체의 료 지출 중 노인인구 비중이 50%를 넘었다. 생명윤리법과 정보보호법 등 법률 개정과 특례는 메디컬 트윈, 디지털 트윈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 유전체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가 나올 수 있다.”

△배홍용=“만도는 강원도와 여러 형태로 협력해왔다. 다만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선, 다른 지역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은 속도 가 빠르지 않다. 예를 들어 대구와 경북의 경우 지역에서 나서서 법적 제정이나 규제완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제품뿐만 아니라 공정과 개발 등의 일련의 프로세스화돼 있고, 또, 산업과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립방정식이다. 강원도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늦은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특정 계획을 통해서 역량을 다진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선도적인 지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에는 속도가 필요한 것이다.”

△박정환=“디지털 헬스케어는 신산업이다. 산업구조가 다양하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성장세도 가파르다. 반도체 시장은 현재 5000억 달러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500억 달러이지만, 5년 뒤에는 두 시장이 1조 달러로 똑같아진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투자돼야 하는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에 투자된 자금은 대략 250억원이다. 더욱이 강원도에는 투자 유치할 벤처캐피탈이 전무하다. 구급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강원도랑 원주다.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다. 규제 자율특구 우수특구 지정으로 그쳐선 안된다. 대규모 실증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된다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강원도가 될 것이다.”

△신훈규=“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굉장히 복잡하다. 세계 경제규모 6위에 올랐고, 수출과 수입 측면에서 지역에서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조를 보인다. 적은 투자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지자체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 또, 정부 사업을 유치하려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가진 역량을 활용하는 데도 전향해야 한다. 오는 과정은 강원도에 잘하는 분야를 활용하기 위한 모색으로 정리할 수 있다. 외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와 디지털 의료기기 등 해외 각지에는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검토해 누군가는 답을 찾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리/김덕형

2023년 08월 31일 (목)

종합 01면

江原日報

‘아기 울음 뚝’ 출생아 年 7천명 붕괴 위기

작년 도내 출생 7,278명 역대 최저 ... 7년째 감소
합계출산율도 ‘0.968명’ 그쳐 조사 이래 가장 낮아
양양·정선·영월·평창은 1년간 100명도 안 태어나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7,000명 선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3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 8,000명 선이 붕괴된 데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에 그쳐 갈수록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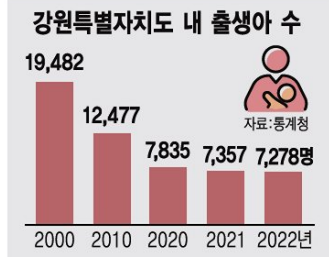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7,27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7,357명) 대비 79명 줄어든 것으로 역대 최저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7년째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다. 202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8,000명 밑으로 내려왔고, 2021년과 2022년 각각 478명, 79명이 추가로 줄며 7,000명 선 사수도 아슬아슬해졌다. 2002년 도내 출생아 수가 1만5,314명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불과 20년 사이 수치가 반 토막 난 셈이다.

시·군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원주가 2,0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내 2위는 1,509명을 기록한 춘천이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출생아 수가 1,000명을 넘긴 곳은 원주와 춘천 두

곳뿐이었다. 양양(84명), 정선(90명), 영월(95명), 평창(96명) 등 4개 지역은 1년간 집계된 출생아 수가 100명을 밑돌았다.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지난해 도내 4.8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0.



979명) 대비 0.011명 감소한 0.968명으로 나타났다.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도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1년 전보다 0.14세 늘어난 32.75세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출산율은 상반기까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지는 추세”라며 “혼인율도 낮아지고 있어 연말까지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4만9,000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만1,000명 감소하며 25만명 선이 무너졌다. 1970년 이후 53년 만의 최저치다. 전국의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현이기자 haha@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08월 31일 (목)

종합 02면

춘천 서면대교 건설 국비 600억 확보

춘천 서면대교 건설을 위한 국비 600억원의 반영이 확정됐다.

두둑한 예산 확보로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 기대가 높아진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사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에 춘천 서면대교 건설 예산으로 국비 600억원이 포함됐다. 서면대교는 이미 올해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국비 600억원과 지방비 600억

한기호 의원 “주한미군 주변지역사업 예산 반영 확정”

타당성 재조사 통과 시 내년 상반기 중 설계 착수 가능



원 등 총 1,200억원이 본격 투입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기획재정부는 서면대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연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연말 타당성 재조사까지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설계 착수도 가능하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는 B/C(비용대비편익)가 1.06으로 나와 경제성은 무난히 충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도와 춘천시 등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와 착공을 동시에 하는 턴키 방식을 검토 중이다. 개통 목표는 2028년이다.

서면대교는 춘천시 서면 금산리에서 중도동 일원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레고랜드 개장 등 춘천권역의 대규모 관광시설 확충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의 이용 수요와 통행량 증가로 인한 분산 교통망 확보, 제2경춘국도와의 연계 교통망 차원에서 건설이 시급하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뤄낸 성과라 보람을 느끼고, 서면대교 조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31일 (목)

종합 02면

양양 현남면 주민 “개발진흥지구 해제 잘못된 정보로 혼란”

일각서 해변 난개발 우려 제기
군 “중첩규제 해소 차원” 설명
이장협 사실 파악 후 강력 반발
“대기업 소유 부지로 피해 막대”

속보=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
계획 재정비(본지 8월 28일자 2면)와
관련, 이번 계획의 중심인 남해리 등 현

남면 주민들이 ‘난개발’을 제기한 일부
보도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주민들을
혼란케 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
욱이 특정 대기업 소유의 토지가 많은
현남면 지역의 경우 “그동안 해당 대
기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
다”며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거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현남면이장협의회는 국도 7호선과
여관장 등에 ‘모 그룹은 주민갈등 야기
하는 행위 중단하라’, ‘현남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의회 명의의 현수
막을 최근 게시했다.

주민들은 군의 재정비 계획과 관련,
‘양양군 해변 난개발 조정’ 등에 대한 보
도가 이어지자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
하고 나섰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양양군은 중첩
규제 해소 차원에서 군관리계획 재정
비를 통해 개발진흥지구 해제를 추진
하고 있다. 특히,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
여 전히 단독주택 3층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층 이하로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최근 현장을 방
문, 해당 마을이장 등을 대상으로 군관
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
다. 양양군으로부터 사실을 파악한 주
민들은 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내

용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하고 주민 서
명 등을 통해 강력 항의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대기업 소유 토지의 주택
에 대해서는 부지 매각은 물론 증개축
과 집수리 조차 제한하는 등 주민불편
에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본인들의 이
익을 위해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지역개발은 뒷전인 채 주민을 불모로
벌이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31일 (목)

종합 02면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기업 유치 관건

10월 중순 기공식·연말 착공 계획
데이터 기업 입주 실패시 사업 차질
시 “친환경 장점 내세워 행정 지원”

춘천 동면 일원에 들어서는 수열에너
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올 연말 착공한
다.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는만큼 기업
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쟁점으
로 떠올랐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현재
토지 보상 비율이 83%에 이르는 점을
감안, 연말에는 착공하겠다는 계획이
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공사를
말을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 기공식은
소양강댐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10월 중순쯤 열릴 예정이다.

동면 지내리 일원에 조성 중인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면적은
81만㎡로 2027년까지 사업비 3400억
원을 들여 소양강댐 심층냉수를 활용해

친환경 데이터 집적단지과 스마트팜 등
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춘천시와 강원
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수열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데이
터센터 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다. 산악지대에 위치, 평균기온은 11.1
도이고 관측 이래 지진 발생 이력이 전
무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데이터센터
의 필수조건인 주·예비 전력 공급을 위
해 단지내 변전소 2곳도 설치할 계획이
다. 무엇보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연료
를 직접 연소하지 않아도 되는 수열에
너지의 장점도 전면 내세웠다.

관건은 기업유치다. 데이터 관련 기
업을 유치에 실패하면 해당 사업 자체
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기업이 입주 의사를 타진한 것으
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전 상황
을 지켜봐야 한다. 김운기 춘천시의회 경
제도시위원회장은 “기업을 제대로 유치
하지 않으면 놀리는 땅이 될 수밖에 없
다”며 “기업과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곳
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기업유치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주관하고 있는데 친환경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인 만큼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
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31일 (목)

사설/칼럼 19면

윤희순 선양 사업 제자리 찾아야

-공식 추모행사 취소, 조직·사업 체계화 숙제

한국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를 기리는 추모 사업이 난관을 맞고 있습니다. 애국지사 윤희순 기념사업회는 지난 29일로 예정됐던 88주기 윤희순 추모 다례제 공식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사업회는 이사장이 사임하는 등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성들을 중심으로 항일 활동을 펼쳤던 윤 의병장의 추모행사가 차질을 빚자,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기념사업회가 빨리 운영을 정상화해 윤 의사에 대한 추모 활동을 본격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윤희순 기념사업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춘천시에 올해 추모제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올해 추모행사는, 공식 행사 대신 춘천 공지천 의암공원에서 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성 의병운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춘천에서 행사가 초라하게 치러진 반면, 타 지역에서는 윤 의사의 선양 행사가 활발하게 펼쳐져 대조를 보였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윤 의사의 본적이 충주라는 점을 들어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로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 충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윤 의사의 본적지 탐방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 해금 연주자 고수영은 오는 31일 국립국악원에서 윤희순 등 여성 독립운동가 4명을 소재로 한 공연 '녹두꽃'을 열고, 국악밴드 해랑은 지난 16일 강릉아트센터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윤희순·조화벽의 삶을 다룬 광복절 기념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여성 의병 활동의 무대였던 춘천보다 다른 지역에서 선양 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기념사업이 제자리를 찾기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부 문제로 사업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희순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2019년부터 5년 동안 5명이 교체됐습니다. 2020년부터 사업회를 이끈 김진선 전 이사장이 지난해 별세한 이후 이사진 구성 등 조직 운영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상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예산이 각 900만원씩 총 1800만원 편성돼 있었으나, 서류 미비 등으로 사업교부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기념사업회의 정상 운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사장 선출을 비롯해 향후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직 정비에 힘써야 합니다. 도와 춘천시의 관심과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31일 (목)

사설/칼럼 19면

강원 임금 '남고북저' 격차 좁혀야

-민간일자리 수 원주 최상위, 지자체 기업 유치에 중점을

강원지역 18개 시군별 민간일자리 수와 임금 수준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을 제외한 도내 민간일자리의 평균임금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다음으로 16위입니다. 바닥권에 머물러있는 저임금 상황도 문제이지만, 강원남부권은 평균임금이 높은 반면 북부권은 가장 하위에 머문 '임금 남고북저' 양상 역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진단됐습니다.

'임금 남고북저' 현상은 최근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국민연금 빅데이터 기반 18개 기초자치단체별 민간일자리 수와 평균임금 분석 결과 강원도적 특이성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평균 임금액조차 미달하는 대표적인 곳은 철원·화천·양구·인제로 모두 접경지대입니다. 반면 원주는 민간일자리 수 비율이 가장 높고, 태백·정선·삼척 3개 시군은 평균임금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권에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대체산업 육성 차원에서 카지노 및 발전소 유치 등으로 굵직한 공기업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강원남부권의 평균임금이 높은 배경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체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적 노력이 지역 고용에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고 밝혔습니다. 반면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북부 접경지는 현재 임금 수준이 낮은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 비중이 전국적으로 세종시 다음 높기 때문에 민간일자리 창출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는 강원특별법 시행 및 개정 추진을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주요 기업체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원주·춘천·강릉은 인구 대비 민간일자리 수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임금 수준에서는 태백·정선·삼척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공기업과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기업들이 유치되지 못한 탓입니다. 시군별 임금 불균형 현상은 2차, 3차 추가적인 지역 사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기에 지자체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내 양질의 일자리가 일부 국한하는 현상을 방지한다면 시군 간 주민 삶의 질에 격차를 더 벌릴 것은 불보듯합니다. 지자체가 한시라도 양질의 기업 유치를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고용 기회와 임금 수준의 정도는 생존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직결 사안입니다.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31일 (목)

사설/칼럼 19면

평창 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에 거는 기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원본을 보관, 전시하게 될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가칭·이하 실록박물관)이 올 10월26일 개관한다. 실록박물관에는 1932년과 2006년, 2018년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되돌아온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간나오토 일본 총리 도서 반환 계획에 따라 2011년에 반환된 의궤 82책 원본이 고궁박물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일제가 오대산사고에 있던 실록과 의궤를 도쿄대학으로 가져간 것은 한국을 영원히 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한민족 정신 수호의 핵심을 들여다본 것이다. 게다가 관동대지진 때 대부분이 소실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대출돼 화재를 면한 것을 되찾아왔다. 환수위원회 관계자들이 무수히 일본으로 건너가 기울인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겨웠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그런 과정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 돌이켜보면 실록박물관 개관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문화의 시대로 불리는 오늘날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진작 오대산으로 돌아왔어야 했다.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당초 예산의 변동 등으로 인해 이번 실록박물관 개관은 ‘부분 개관’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록박물관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대산사고본 실록과 의궤를 전면 이관하는 작업은 내년께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실록박물관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 박물관의 탄생 배경과 역사, 문화, 정서, 정체를 실체적으로 지켜 나가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국민에게 각인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은 막중하다. 실록박물관은 바로 이 같은 스스로의 존재 당위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지향해 나가야 한다.

이제 실록박물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의 관광자원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곤란하다. 본질적인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역사와 현재는 미래적인 가치를 잘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록박물관은 오대산의 전 현장과 연결되고 상시적으로 호흡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실록박물관은 단지 조선 왕조의 행사 기록 전시장이 아니라 민족의 비극적 애환과 오대산의 숨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앞으로 실록박물관 운영 시 그만큼 분명한 역사의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고려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31일 (목)

사설/칼럼 19면

국비 9조5,000억원 반영, 이젠 지키는 것이 중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비 확보전에서 목표인 9조5,000억원 달성에 성공했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과 주요 SOC사업이 대거 반영돼 신성장사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원주에 들어서는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총 205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총 400억원)와 함께 AI 기반 K-디지털헬스시장진출지원 플랫폼(총 200억원) 등의 구축을 위한 1년 차사업비가 모두 포함됐다. 미래전략 핵심사

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서 신성장사업의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비(부처 요구 3,000억원에 3,214억원

반영), 강릉~제진 철도 건설비(부처 요구 1,600억원에 2,464억원 반영) 등의 계속사업비도 요구한 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부안에 담겨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강원자치도의 이 같은 국비 확보는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로 결정한 상황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강도 높은 건축 재정 방침을 밝혔다. 국비 확보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김진태 지사를 필두로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한 행정력의 집중, 강력한 정치

적 영향력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의 전폭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빠르면 올 10월께 총사업비를 확정 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회의 국비 심의 과정이 변수다. 지금부터는 확보된 국비를 지켜 나가면서 예산이 감액되거나 국비 확보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가 그대로 국회 심의를 통과하거나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나

같이 다 강원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이어서 중요한 예산이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에도 대단히 중차대한 사업들이다. 정

반도체·철도 건설비 등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도 행정력·지역 정치권 지원 등이 이뤄낸 성과

국회 예산 통과 때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돼

부안에 포함된 예산이 턱없이 사라지거나 대폭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강원자치도의 현안 사업들은 늘 정부로부터 등한시돼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그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제 시작이라는 자세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자치도의 도약을 위해서도 모두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사업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사업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국가 예산의 확보는 곧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된다. 빈틈없이 더 철저히 대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